

공동체 만들기의 정치 : 이념, 담론, 실천

박경섭*

목 차

1. 공동체라는 질문
2. 공동체의 이념적 장소: 사유와 실천의 간격
3. 공동체의 영토화: 문서와 상상의 지리로서 마을공동체
4. 마을과 공동체 만들기의 주체와 담론: 정치성과 차이의 배제
5. 공동체의 정치화: 공동체와 해방의 관계

〈국문초록〉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는 한편으로 진부하고 한편으로는 혁신적인 어떤 것이다. 공동체는 근대 이전의 마을에 대한 향수와 무관하지 않고 다른 삶의 형태에 대한 상상과 실천이기도 하다. 공동체 만들기는 복지, 안전, 소득 불평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진다. 공동체라는 개념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과 현장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이 글은 공동체의 정치를 탐색한다. 어떻게 공동체는 비정치화 되며, 어떤 실천과 언어들 속에서 그러한가? 무엇보다도 공동체는 담론과 실천 사이의 어긋남 속에 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에서 공동체는 도시생활과 부합하지 않는 이상이자 일종의 상상의 지리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메우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설명하는 호혜성, 나눔, 연대, 소통 등의 언어들이다. 공동체의 비정치화를 가능하게 하는 또 다른 조건은 공동체를 통한 주체화 과정에 있다.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공동체의 가치와 의미는 사회의 하층이나 상층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 공동체는 중간계급의 이데올로기 및 실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언어는 현실 속에서 모호하고 긍정적이며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작동한다. 특히 공동체의 이상을 나타내는 '공유'라는 말

* 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강사, 5·18연구소 연구원.

의 용법은 매우 정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규범적으로 사용된다. 공동체의 보수성을 경계하면서 공동체를 둘러싼 담론, 공동체만들기 실천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정치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체의 정치화에서 핵심 문제는 공동체와 자유의 딜레마이다. 공동체와 자유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공동체의 정치의 출발점이다. 그 출발점을 가리키는 것은 바로 1980년 오월 광주의 어떤 공동체다.

주제어: 공동체, 마을공동체 만들기, 중간 계급, 정치, 통치성, 비정치성, 자유, 5월 항쟁

1. 공동체라는 질문

지금 공동체라는 말은 너무 흔하게 이야기하고 또 듣게 되는 말이지만 한국 사회에서 실천과 관련된 공동체에 대한 사유와 성찰의 역사는 길지 않다. 1980년대 한국 사회에서 학술적 논의가 아니라 실천적 차원에서 공동체 논의가 반외세, 반자본적 문화 운동 차원에서 논의되기 시작했고(정이담 외 1985)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의 공동체 논의는 밑으로부터 구성된 종교적, 생태적 공동체들의 의미를 확인하고 자본주의적 생활양식에 대한 대안을 모색했다(최협 외 2001, 한국도시연구소 2003). 근래에는 자본주의의 신 자유주의적 작동 형태인 사유화와 경쟁, 공공 영역의 축소, 안전과 복지의 개인화에 대한 해법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요구가 사회의 전 영역에서 포괄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조한혜정 2007;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 2013; 박재동·김이준수 2015). 도시재생과 지역 사회 발전 논의에 있어서도 구체적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지속가능 발전과 공동체 기반 발전community-based development은 필요불가결한 것(국토교통부 2017.4; 이상준 2017)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공동체가 점차 정치적·행정적 수사로서 사용되면서 공동체에 대한 성찰과 정치는 퇴색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 공동체 담론을 성찰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실천적 공동체 담론과

1980년대 중반 이후 서구에서 전개된 공동체 이론 사이의 간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의 논의가 목적과 의도를 가진 현실의 공동체 구축을 염두에 두고 현실에 대한 개입과 참여를 강조했던 반면 서구에서의 논의는 인간 존재의 조건, 정치적인 것의 기능성의 조건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성찰에 초점(로자 외 2010[2017])을 맞추고 있었다. 사유와 실천 사이의 이러한 간격은 단순히 서구 사회와 한국 사회의 담론 지형의 차이, 정치철학과 미학의 견지에서 공동체를 논의하느냐 사회과학의 입장에서 공동체를 탐구하느냐의 차이는 아닐 것이다. 이상과 삶이 긴장을 유지하지 못할 때 성찰과 정치적인 것의 자리는 좁아진다. 특히 마을공동체의 비정치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마을만들기나 공동체 프로그램은 아래로부터 창의성과 자율성과 충돌하는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또한 대안적 삶의 형태, 생활양식으로서 공동체는 경제적 기초와 관련해서 사회적 경제와 함께 검토되어야 하지만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성, 공동체의 생존과 성장 전략의 측면에서만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마을공동체를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으로 전환을 넘어서 시장경제와 공동체 경제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체의 담론과 실천 지형에서 공동체를 비판적으로 탐구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에 대한 성찰적인 사유, 현실의 공동체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작동 형태, 양자를 매개하는 공동체 옹호론자들의 담론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글은 공동체의 이상과 실천, 양자의 간격 속에서 공동체의 정치와 비정치성을 문제삼고자 한다. 공동체의 정치는 공동체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와 무관하지 않다. 공동체의 정치를 검토하면서 이 글이 제기하는 질문은 다음의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마을만들기와 공동체 사업의 현장에서 정치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자유와 해방의 정치로서 공동체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러한 질문을 풀어가게 위해 이 글은 공동체 운동이나 시골 지역의 공동체 아니라 도시에서 펼쳐지는 마을공동체 정책과 사업의 현장과 담론을 살펴볼 것이다.

2. 공동체의 이념적 장소 : 사유와 실천의 간격

2000년대에 들어 한국사회에서 공동체는 불평등과 갈등, 복지와 건강, 실업과 빈곤을 비롯한 국가적·사회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공동체를 옹호하는 이들은 시장의 실패, 정부의 실패, 사회 혹은 사회적인 것의 위기(엘리엇&터너 2015)를 지적하면서 자율성과 자발성에 기초한 공동체와 마을을 이러한 문제들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한다. 한국에서 공동체 구성에 대한 탐색과 운동의 초기 형태들은 반시장적이며 비국가적이고 반도시문명적인 사회운동, 지역운동으로 등장했지만(구자인 1995; 김용우 2002; 강수돌 2007),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치governance 체제를 도입하고 분권과 자치를 내세우고 마을만들기와 공동체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동체의 현장은 정책, 사회운동, 주민 활동이 맞물린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관 주도의 사업과 프로그램이 활성화됨에 따라 새로운 삶의 형태나 대안적 생활양식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실험과 추구, 운동, 활동의 정치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

자본주의적 축적의 새로운 토대를 만들어낸 신자유주의 프로그램들이 사회와 삶의 모습들을 바꿔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퇴행적일 수 있다. 신자유주의적 전지구화와 동반된 사유화와 경쟁의 논리, 실천 양식은 이러한 공동체의 이상과 공동체 옹호자들의 사고와 대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공동체는 이를 옹호하는 이들과 마을주의자들에게 잃어버린 과거의 인간적 사회 형태나 만들어나갈 미래의 유토피아적 성격이 강하다. 한국 사회의 공동체 만들기 담론에서 정치적 전망은 간과되고 있지만 공동체는 현재적 조건 속에서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운동이자 다른 삶을 실천하는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주의communism를 현재의 상태를 폐기해 나가는 ‘현실의 운동’”이며, 이 운동의 여러 조건들 역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제들”로부터 생겨난다고 지적했듯이(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1845-1846[2007]: 67

면) 공동체의 자양분은 자본주의 사회 안의 인간관계에 기초하거나 분업과 협업을 활용한 자본주의의 작동 형태에서 발견할 수도 있다. 사회관계와 연결망에 기초한 공유 경제는 자본주의 진화 속에서 생성된 것이다.

공동체라는 말은 어떤 측면에서는 진부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혁신적이다. 공동체라는 말이 진부한 이유는 성찰과 비판과 무관하게 지나치게 남용되고 너무 많이 언급되었기 때문이다. 공동체라는 말이 혁신적이라면 주류의 생활 양식을 넘어서거나, 우리가 경험했으나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나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곳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공동체는 가족과 마을뿐만 아니라 민족과 국가에 대해서도 정치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듯이 연대와 공유로 보이는 사회관계에 대해서도 그 이름을 허용한다. 더군다나 인정이 넘치고 상호부조의 전통이 살아있는 목가적인 마을이라는 공동체의 스테레오타입, 공동체의 이미지는 공동체에 대한 현대인의 사유 방식, 즉 근대화, 도시화, 산업화, 자본주화 과정에서 상실한 것에 대한 기억과 정서와 결합되어 있다(장-뤽 낭시 1983[2010]). 1980년대부터 서구의 일부 사상가들의 공동체에 대한 성찰은 이러한 익숙하고 진부한 공동체 관념과 결별하고 있다. 특히 현실 공산주의의 몰락 속에서 전체주의에 의해 전유되지 않는 공동체를 모색한 장-뤽 낭시(1983[2010])와 모리스 블랑쇼(1984[2005]), 주체가 아니라 특이성 측면에서 도래하는 공동체를 제시한 조르조 아감벤(1990[2014]), 정체성과 주체화 사이에서 평등의 공동체를 사유하는 자크 랑시에르(1998[2008]) 등은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또한 공동체에 대한 실천적 질문은 공통적인 것의 생산에 대한 강조(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2009[2014])와 무관하지 않고, 지역 공동체의 경제적 기초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주체화와 경제적 다양성의 관계에 주목하는 공동체 경제에 대한 논의(Gibson-Graham 2006)를 진전시켰다. 특히 낭시와 아감벤의 공동체에 대한 사유는 고립적 개별 주체가 아니라 특이성에 기초한 공동체의 존재론으로 우리를 정치의 근본 조건에 대한 성찰로 이끈다(로자 외 2017: 148~151면). 낭시와 아감벤

의 사유가 새롭게 공동체를 탐구하거나 공동체의 해체를 모색하는 이들에게 자극이 될 수는 있지만 현실의 공동체, 마을만들기의 현장과 담론을 성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동체 지향·이상과 만들기의 대상으로서 공동체의 긴장에 대한 성찰이 없는 공동체 담론은 공동체의 비정치성을 묵인하는데 이용appropriate 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집단은 임의단체인 주민 단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기업, 지역의 시민단체까지 다양하지만 대부분 이웃들 사이의 호혜적 관계로서 공동체와 마을이라는 관념에 무비판적이며 목적으로서 공동체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 공동체와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많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마을이나 공동체를 지나치게 낭만화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계하면서 공동체 사업과 마을만들기를 도시를 관리하는 권력의 ‘통치기술’로 바라본다(박주형 2013; 김성운 2014). 특히 박주형은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검토하면서 신자유주의 도시화에 저항하는 ‘해방적 정치’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 정치기획의 일환일 수 있고, ‘공동체를 통한 통치’를 작동시키는 작업이라고 평가한다(박주형 2013: 8면). 더 나아가 서울에 등장한 다수의 마을들을 서울시 정책의 산물로서, 공동체가 통치의 목적으로 ‘도구화’되는 양상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마을공동체를 통치권력과 시민의 접합적인 관계 안에서 생성되고 발명된 것으로 파악하는 시각도 존재한다(김예란 외 2017: 42면). 하지만 마을공동체를 통치의 도구로 활용하는 권력은 대상을 통제하는 규율적 권력이 아니라 대상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분별하고, 지지하고 경영하고 반성하는 성찰적인reflexive 권력(서동진 2011: 78면)이다. 따라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마을만들기 사업 현장에서 이러한 성찰적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주체를 생산하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공동체 프로그램을 외부에서 주입된 것, 권력의 일방적 행사로 간주하는 것, 공동체가 본질적인 실체이거나 자연스러운 소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공동체 사업

이 지역과 주민들의 생활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공동체의 주체는 누구인지를 파악하지 못한 채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대한 원론적 비평, 공동체의 발명에 대한 비정치적 승인과 요청에 그칠 수밖에 없다.

3. 공동체의 영토화 : 문서와 상상의 지리로서 마을공동체

자율성과 독립성을 기초로 하는 공동체의 이상과 이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실행되는 사업과 어울리지 않는 것일지 모르지만 ‘만들기’의 대상으로서 공동체, 사업 목적과 내용 및 예산 설계로 만들어진 마을은 현실에서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공동체의 형태들이다. 정책의 집행은 관료계 하에서는 불가피하게 하향식임에도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이념적으로 상향식이다. 따라서 행정 문서상의 마을과 공동체는 실제로 도시의 특정 장소, 즉 현장에서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과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근거가 되는 공동체 개념은 우선적으로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정부의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응하여 2010년 3월 1일 제정된 「광주광역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지원조례」에 따르면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며 정서적 유대의식을 갖고 문화 등을 공유하는 공동체”로 규정되어 있다. 동시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 대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전통과 특성, 문화자원 등을 활용하여 이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가는 것”으로 규정한다. 2012년 3월 15일 공포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로 규정된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

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으로 정의된다.

조례와 정책 보고서에서 공동체 개념과 마을 개념이 순환적 지지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공동체 개념이 활용되고, 공동체를 구성하고 만들기 위해 마을 개념이 이용된다. 따라서 둘의 상호지지 형태는 동어반복적이고 공허하다. 공동체와 마을 개념이 규범적이면서 추상적이고 관념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인한다. 첫째는 도시의 삶 속에서 그러한 공동체를 확인하고 경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과거에 있었을법한 자연발생적 공동체나 마을을 규정할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대도시의 특정 지역에서 이러한 마을 개념에 적합한 사회적 실체를 발견하는 것은 쉽지 않다. 둘째는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사고의 특성 때문이다.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사유의 핵심에는 상실과 향수의 정서가 있다는 것은 간과하기 힘들다. 현대인들에게 공동체는 항상 근대 사회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거나 근대화, 도시화, 산업화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낭시 2010).

따라서 공동체는 회복되어야 하거나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서 재생 혹은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상실한 공동체를 복원하려 하지만, 그것이 사라진 이유가 근대화 과정의 불가피한 결과였다는 주장(바버 2006:64면)은 잘 고려되지 않는다. 근대화, 도시화는 자유의 확장이자 신분 질서 하의 억압적 공동체로부터 해방의 과정이기도 했다. 공동체를 구성하는 요소 중의 자발성과 독립성이 거론되지만 공동체의 구성과 재생은 역설적이게도 인위적인 노력과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는 개인의 선택에 의존해야 한다(바우만 2009)는 것 또한 공동체의 핵심 딜레마 중 하나이다.

“서울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시민 주체가 되기를 지원할 뿐 아니라 규범화·의무화(예컨대 ‘해야 한다’는 어조)한다. 이는 권력이 시민의 자유와 자율을 ‘허용’하고 ‘요구’한다는 점에서 모순적인 논리를 지닌다 (허용 받아야 하고 요구되는 무엇이라면 그것을 과연 자유나 자율이라 부를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정책 프레임에서 공동체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만들’어져야 하는 ‘사업’으로 서술된다.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에 서 공동체란 통치체제에 의해 배양되고 추진되는 시민의 자발과 참여라는 이중성을 띤다.”(김예란 외 2017:48면)

특히 마을공동체 정책의 육성과 참여의 딜레마와 함께 마을공동체의 ‘사업화’ 과정에서 행정의 발 빠른 행보는 주민 참여의 건강함을 손상시킬 수 있다(김은희·이영범 2013:96면). 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한국사회에서 마을공동체 논의들과 활동들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행정의 문서와 규정에서 공동체는 매우 단순명료하게 나타나며 세심한 관리와 육성의 대상이 된다. 관리, 육성, 배양의 대상으로 마을공동체는 사업의 자격 규정과 공모 사업의 유형에서 명료하게 나타난다.

광주광역시도 마을공동체 사업의 증진과 통합적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행한 정책은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실현’을 위한 ‘마을공동체 아이디어 컨퍼런스’(2013~2014년)였다. 당시 공모에서 규정한 참가자격은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자치회, 부녀회, 주민협의체(15세대 이상), 등록된 비영리 민간법인 및 단체 등”이었다.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참가자격이 공식적 조직에 제한됨으로써 새로운 공동체의 발굴과 육성이 어렵다는 평가에 따라 사업유형을 세분화하여 참가자격은 완화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공동체는 마을 내부에 있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모임, 주민활동가와 주민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나타난다. 광주광역시 동구는 ‘2017년 동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고’에서 지원사업의 유형을 씨앗기, 새싹기, 성장기로 분류하고 있다. 씨앗기(1-2백만원 내외 차등 지원)로 분류하는 ‘마을공동체 형성 지원사업’의 참여대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참여대상: 마을공동체를 지향하는 주민 5인 이상 모임 또는 단체
 - 공고일 현재 우리 구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장(영업장) 소재지를 우리 구에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주민
 - 기존 또는 신규모임 모두 가능
 - 마을과 지역사회에 공익적인 성격의 모임 또는 단체(단순 친목모임 제외)

새싹기·성장기(천만 원 내외 차등 지원)로 분류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참가대상과 참가조건은 아래와 같다.

- 참가대상
 - 5인 이상 주민협의체 : 독자적인 사업추진과 집행체제를 갖춰야 함
 -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 마을을 기반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비영리단체, 법인,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확보
- 참가조건 : 마을사업 경험이 있는 역량있는 마을공동체
 - 중앙부처, 시 및 구 마을만들기 사업 경험있는 공동체로 제한

마을만들기 행정에서 마을공동체란 마을이라고 상정한 공간에 있는 자생성을 갖고 있는(혹은 역량 있는) 주민모임으로 목적과 자원을 공유한 강한 공동체라기보다는 지원과 배양이 대상이 되는 ‘공익’ 목적의 느슨한 커뮤니티에 가깝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목표는 이러한 주민모임을 지원하여 강화하여 자치 역량 강화하고 향후 사회적 경제를 통해 공동체의 독립성을 확보하게 하고 도시발전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데 있다. 행정의 관점에서 마을은 (지방)자치와 분권의 제도적 구현이자 방법이며, 공동체는 정치적 시민이 아니라 비정치적 주민의 모임이자 네트워크다. 그리고 마을공동체는 ‘행복한’, ‘즐거운’, ‘살기좋은’ 등의 긍정적 어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선(善)한 것으로 표상된다. 이렇듯 조례와 사업 관련 규정들이 영향을 미치는 마을과 공동체 만들기 현장에서 공동체라는 말은 성찰의 대상이 되기 어렵고

독자적인 쓰임새를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사업 현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행위자들에게 공동체는 대체로 마을 혹은 주민모임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행정과 마을활동가들이 마을이라고 상상하는 공간은 과거의 마을, 향수가 소환하는 마을과는 분명히 다르다. 공동체 활동가들은 과거의 마을이 평등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 동(洞)으로 구획된 행정 단위에서도 주민의 삶은 마을이라는 상상의 지리와 일치하지 않는다. 대도시에서는 시골과 달리 인구 이동성이 높으며 주거, 노동, 소비와 유희의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마을 활동가들이 ‘하숙생’이라고 부르는 청년과 장년층에게 마을과 하루 종일 ‘마을살이’를 하는 소상공인, 주부, 어린이, 노인의 마을은 다르다. 그리고 주택과 토지 소유자의 마을과 임대인의 마을에 대한 경험과 감각도 다르다.

이러한 차이, 현실과 상상 사이의 간격은 주민들의 활동과 일련의 잘 정돈된 행정 문서로 조율되는 공동체 사업과 프로젝트로 메워진다. 상상의 지리로서 마을을 실제로 가공하는 작업은 일종의 상품화 논리에 따른 브랜드화 작업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광주광역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마을의 브랜드화에 힘쓰는 지방자치단체는 남구이며 사업의 핵심에는 중간지원조직인 <남구마을공동체협력센터>가 있다. 공동체 사업의 범위는 공식적으로 행정동에 한정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제한된다. 물론 주민센터가 설치된 동 범위를 초과하는 활동들과 공동체운동이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마을’이라고 명명된 공동체는 행정동의 경계 내부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운1동을 ‘까치마을’, 월산동을 ‘달피 달팽이마을’(미로같은 골목길을 달팽이집의 이미지에 비유한 이름)과 ‘덕림마을’(덕림산이라는 지명에 근거한 이름)이라 이름짓는 것은 행정동의 명칭을 친근한 언어로 바꿨다기보다는 일종의 정책적 의지의 표현이다. 월산동에서 ‘덕림마을’은 어디이고 ‘달피 달팽이마을’은 어디인지 명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민은 없다. 동명과

마을이름의 서로의 영역이 합치되지 않으며 새로운 이름은 활동을 자체를 뜻하기도 한다. 일종의 브랜드로서 마을은 마을 자원에 기초한 상품화의 출발점이자 공동체 사업 참여자의 의지와 결속력의 표현으로 정치적이며 정책적인 수사로 활용된다.



〈2016 광주광역시 남구 마을공동체 지도(남구마을공동체협력센터 제작)〉

도시에서 공동체 사업과 마을활동을 통해 마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는 현실의 마을이 고립된 자율적인 단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기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남구 월산동의 경우 마을의 가장 큰 현안은 도심공동화와 재개발구역으로 설정되고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생겨난 공·폐가(약 270개소)¹⁾ 문제다. 공·폐가는 방치되어

1) "월산동이 셉테드 사업의 선정지로 손꼽히게 된 이유는 월산동이 남구의 공·폐가 538곳 중 273곳이 밀집한 지역으로 남구 전체 범죄 발생 건수의 40%가량을 차지하는 지역이기 때문이다."(<광주매일신문> 2016년 6월 30일자 기사 『벽화·가로등·CCTV… 범죄없는 유토피아 꿈꾼다』중에서). 광주광역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폐가 전수조사에 따른 빈집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스마트 도시분석 포털(gis.gwangju.go.kr)의 부동산 정보조회에서 기본정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쓰레기가 쌓이고 악취를 풍기며 때로는 범죄의 잠재적 온상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공동체사업과 마을활동을 통해 공·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소유주와 협의가 필요하지만 주민 활동가들에 따르면 공·폐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월산동 주민이 아니라 외부인이다. 마치 부재지주와 같은 마을 외부의 토지와 주택 소유자는 재개발로 인해서 생겨날 수 있는 이익을 예상하고 투자목적으로 공·폐가를 보유하고 있다. 그들은 개별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 수익을 올리기보다 재개발로 인한 지가가 상승할 때 공·폐가를 처분해 수익을 획득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다. 공·폐가의 방치가 분명히 거주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와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공동체 사업을 통해 마을정원, 텃밭, 주차장,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공동체 공간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마을 주민들이 공동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이해관계자 연결망은 항상 마을을 넘어선다. 마을과 그 외부의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도시 속 마을과 공동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의와 관련이 있다. 로버트 니스벳과 같은 신보수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지역 공동체를 부양시킬 것이라고 믿고 작은 공동체가 자립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생각하는 공동체 모델은 마을이나 소도시로, 지역민들이 소유한 상점과 은행이 있는 곳이다(세넷 2013:397~398면). 하지만 사회적 좌파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화폐는 지역순환적인 것이 아니기에 그런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여하튼 도시 속에서 마을 혹은 공동체는 고립된 정치적, 경제적 단위일 수 없다.

4. 마을과 공동체 만들기의 주체와 담론 : 정치성과 차이의 배제

공동체 사업과 마을만들기는 통치(統治)와 자치(自治)와 사이에서 놓여 있다. 자율성의 증진, 관리와 조절을 통한 자율적(혹은 신자유주의적) 통치 체계의 확립과 주민 참여에 기초한 자치는 현실 속에서 엄밀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마을공동체의 민주주의는 화폐와 노동을 비롯한 다양한 물질·정서적 자원들의 획득, 이용, 재생에 대한 결정을 주민들이 평등한 자격으로 행하는 것이고 행정의 역할은 이러한 주민활동을 지지하고 결정의 공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민주화는 지역적 토론과 의사결정을 위한 풀뿌리 제도의 발전을 요구하며 그 결정에 경제적 권력에 관한 참여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민주화는 의미가 없다(영 1990[2017]).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체 사업이 자치를 확장하고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러한 공간이 민주적으로 작동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특히 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 긍정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는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자치를 확장하는 것이 그 해법 중의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다. “민주주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한에서의 가치”(파머 2012: 79면)라고 여전히 믿는다면 공동체 사업과 주민활동이 마주하는 지점, 공동체 사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마을 내에서 갈등의 미시정치적 차원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을을 한정짓는 동(洞) 단위의 자치 행정은 주민자치위원회를 기초로 작동한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성별, 세대별, 직종별로 평등하게 구성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면 주민센터는 동사무소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티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은 대부분 50~60대의 남성이고 동 행정과 주민들과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기업이나, 자영업자, 유관 단체의 구성원들이다. 주민자치위원들의 정치성향이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와 무관하게 ‘마을일’은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의 자생단체들이 조직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각 동마다 자생단체의 범위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통장단(혹은 통장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청·장년회, 새마을협의회, 방범대, 바르게살기위원회, 봉사단체, 아동센터가 포함된다. 공동체 사업이 분명히 자치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공동체 공모 사업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주민 조직 및 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동 행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²⁾이다 (광주광역시남구마을공동체협력센터 2016: 143~146면).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한 자생단체가 맞물려 돌아가는 마을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배제의 선(線)을 만들어내고 마을 내의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이 공격 공간에 진입하는 것을 의도치 않게 차단할 수도 있다. 또한 공동체 활동은 마을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더 넓은 의미의 제도 정치, 정당과 무관하지 않지만 마을에서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활동가들이 적지 않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진보나 보수냐가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밝히더라도 마을일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상철 외 2014: 92~94면)는 것이다. 즉 마을일은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고 근면과 성실함을 요구하는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활동인 것이다.

공동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마을 공동체와 참여 민주주의의 밀접한 연관성에 대해서 주장하지만 마을이 참여 민주주의 이상이 구현될 수 있는 장소라고 확신할 수 없다. 마을만들기의 과제 혹은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주민 대표성의 한계(황익주 외 2016)는 마을공동체의 보수성과 관련이 있다. 지자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혈연, 학연, 지연 관계가 사회관계를 지배할 수

2) 2016년 남구의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새싹 단계: 자격은 사업경험이 있는 공동체, 500~2,000만 원 사이의 지원, 자부담 10%이상)에 참여한 주민조직 및 단체는 39개로, 이중 주민협의체는 13개, 주민자치위원회 9개였다.

있다. 지역 정치 구조는 주민들이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과 자원 배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불평등을 양산하고 억압과 지배에 기여(영 1990[2017]: 521~522면)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정치 구조와 사회관계의 영향력과 더불어 도시에서 마을공동체가 보수적일 수 있는 다른 이유는 도시생활의 특성 때문이다. 마을에는 온종일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과 그저 동네와 단절되어 잠만 자기 위해 들어오는 하숙생들이 있다. 동네 바깥에 일터나 학교가 있는 대부분의 청·장년층이 마을에서 지내는 시간은 많지 않다.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동네에서 보내는 사람들은 노인, 동네에 가게가 있는 자영업자, 전업 주부(아이를 돌보는 엄마들)과 어린이들이다. 이 중 마을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노인과 자영업자들이 대부분이고 이들의 정치적 성향³⁾(장덕진 2014)은 하숙하는 청·장년층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보수적일 수 있다.

공동체 담론은 공동체를 만들거나 마을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위치, 재산과 소득의 정도, 삶의 이력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사업에서는 이식(移植)할 수 없는 주체보다는 참고할 수 있는 성공사례와 모델화가 중요하다. 하지만 공동체의 주체 중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낸 행위자들은 특징은 주민의 참여와 자발성에 기초한 공동체의 이상에 의문을 갖게 만든다. 특히 도시의 특정 공간을 상당기간 점유하고 살아온 선(先) - 주민들이 만들어낸 공동체는 극히 드물다. 성공한 공동체로 알려진 많은 모델들의 생성과정을 살펴보면 도시의 특정 장소에 도래한 외부인들이 모임을 만들고 기존 주민들과 협동한 경우가 많다. 성공한 공동체, 마을만들기의 모델이 된 공동체를 만든 이주자들(혹은 타자들)의 이력은 간과하기 힘들다.

3)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 성향의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도에서 직업 별로 고정적인 요소가 발견되는데, 가정주부에서 지지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무직자, 자영업자, 블루칼라 순으로 모두 65% 이상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학생은 17%, 화이트칼라는 35%의 지지율을 보였다. 이에 대해 장덕진은 박근혜 지지층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낮다고 평가한다(장덕진 2014).

1990년대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 인근에서 시작된 공동육아모임이 ‘성미산마을’로 알려지기까지 이 모임을 만든 사람들은 여성주의자였거나 사회운동의 경험이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86세대’였다(유창복 2010). 서울의 국립대를 졸업하고 일본의 한 국립대학에서 농학박사 학위를 받은 구자인은 2004년 진안군청의 계약직 공무원으로 시작해 전라북도 진안을 한국 마을만들기의 메카로 만드는데 기여했다(구자인·곽동원·이호을 2010). 벽화마을로 유명한 관광지이자 마을만들기 사업의 모델로 널리 알려진 경상남도 통영시 ‘동피랑마을’(윤미숙 2015)을 만드는데 기여한 마을 활동가 윤미숙은 대학을 졸업하고 기자 생활을 하다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 농촌의 복지공동체로 널리 알려진 전라남도 영광군의 ‘여민동락공동체’를 만드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 강위원은 학생운동으로 구속 수감되었던 경험이 있다(강위원 2017). 사회운동을 경험하거나 대학을 졸업한 마을 활동가들은 자신의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목적과 계획에 따라 모임을 만들었고, 그러한 목적과 이해가 주민의 이해관계가 특정 사건을 통해 맞물렸을 때 마을 공동체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끼리끼리의 모임 혹은 공동체를 주민들의 삶과 맞물리게 한 것은 성미산마을의 경우에 성미산 개발 반대 투쟁이었다(유창복 2010). 적지 않은 사례들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구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주민이 아니라 외지에서 동네에 들어 온 대학 교육도 받았고 신념과 이념을 가진 이러한 이주자들이었다. 도시의 대안적 생활형태로 제시된 공동체들은 이주자의 도래, 기존 주민과 이주자의 마주침이라는 계기가 있었다.

마을활동가의 관점에서 마을은 현재 도시의 문제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공동체는 목표가 된다. 하지만 사업을 통해 만들어질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려, 공동체-되기 혹은 발명에 대한 성찰은 부재하다. 성찰의 부재는 공동체가 돌봄, 호혜성, 나눔, 연대와 같은 모호하고 추상적이지만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러한 용어들이 갖고 있는 긴장과 의미에 대한 무관심과 관련이 있다.

공동체의 창설자들의 사회적 위치를 감안해보면 마을공동체에 참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광주광역시에서 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다양한 마을지를 살펴보면 발행주체는 크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협의체로 나뉘어지는데, 그러한 마을지 발간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살펴보면 공무원, 주민자치위원, 전·현직 통장들, 대학 교육 이상을 받은 화이트칼라와 프리랜서, 시민사회 활동가들이다(김미연 2016). 때때 부르주아지를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 사이의 폭넓고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들 일반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한다면 공동체 사업의 중요한 주체는 중간 계급일 것이다. 중간 계급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 마을만들기와 공동체 사업에서는 가치평가를 배제한, 아니 사용자들에게 의심할 바 없이 긍정적 가치와 의미로 충만한 ‘소통, 호혜, 연대, 나눔, 돌봄, 환대, 우정’이라는 윤리적 언어로 표현된다.

“후기 근대적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경비원이 있는 성벽을 두른 아파트가 아니라 마을이고, 소비를 과시하기 위한 이웃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 관계를 맺어 가는 이웃의 형성이다. 인간이라는 생물적 존재의 생존은 기본적으로 소통과 나눔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를 돌보는 마을을 가지고 협동함으로서 인류는 꽤 오랜 기간 지구상에서 잘 살아왔다. 미래의 주거는 바로 이런 인간 삶의 기본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고, ‘근대주의’를 넘어서서 대안적 미래를 만들어 가는 지점에서 사유되어야 한다.”(조한혜정 2007: 143면)

현재 공동체 담론을 채우는 말들(소통, 나눔, 배려, 호혜성, 돌봄, 우정 등)은 따스하고 착하면서 규범적이다. 개별의 말들과 단어들인 긴장과 난제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공동체 만들기와 연결되면 그 개념들은 긍정적으로 풀어쳐지는 경향이 있다. 공동체를 설명하는 말들 혹은 이념적 용어들의 효과는 공동체의 이상, 이념과 현실의 공동체와 공동체 활동 사이의 틈을 성찰 없이 메우는 것이다. 특히 공유(혹은 나눔)는 공동체의 이상을 설명하는

적절한 개념 중 하나이지만 많은 난점을 내포하고 있다.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의 관계와 나눔, 공동체 내부에서 나눔, 나눔의 정도와 강도는 공동체의 형태와 내용을 규정할 수 있다.

공동체가 자원 공유의 원리에 따르지 않고 면대면 접촉의 장소를 갖지 않는다면 대체로 그것은 이념과 목적을 공유한 결사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결사체-네트워크의 사회 집단의 연속체를 고려해보면 이러한 구별은 상대적인 것으로 세 가지 집단을 엄밀하게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SNS 연결망과 같은 사적 연결망 자체를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통, 연결이나 연대 그 자체가 아니라 연결의 내용, 공유가 공동체의 핵심 문제 중의 하나이다.

공유의 문제가 이야기하는 딜레마 중 하나는 공유의 정도 혹은 강도이다. 공동체를 통해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서로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을까? 개인주의냐 공동체냐 라는 이분법을 문제삼으면서 영은 마이클 샌델(1982)과 벤자민 바버(1984)가 공동체를 ‘공유된 주체성’으로 규정하고 사회의 투명성이 공동체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입장을 취한다고 지적한다.

“공동체 속에서는 사람들이 타인이 되기를 멈추고, 불투명한 존재인 것을 멈추고, 이해되지 않는 상태로 있기를 멈춘다. 이제 사람들은 서로 공감하게 되고,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듯 서로를 이해하면서 융합된다. 주체들 상호 간의 투명성이라는 이 이상은 주체들이 서로 다르다는 점 또는 주체들이 기본적으로 비대칭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부인한다.”(영 2017: 488면)

영은 주체는 동일체가 아니며 자기 자신은 필요와 욕망을 항상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영은 차이의 부정에 이르는 주체 상호간의 투명성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주체들 사이의 공유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공동체의 원형과도 같은 시골 마을에서 주민들은 이웃의 밥그릇과 숟가락 숫자까지 알고 있다는 상투적인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도시생활에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웃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 공동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공유의 미덕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도시생활자들은 도시생활의 매력 중 하나인 프라이버시까지 공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도시 속에서 마을을 상상하고 동류의 마을 주민들 사이의 나눔이라는 이상이 갖고 있는 위험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제인 제이콥스(1961[2010])는 많은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도시계획의 이상을 비판하면서 그러한 공생togetherness에 대한 요구가 사람들을 갈라놓는다고 지적한다. 공적 보도street 생활이 없다면 사생활을 확대해야 하는데, 즉 ‘공생’을 받아들이거나 접촉 없는 삶을 감수해야 하지만 어느 쪽이든 결과는 비참하다(제이콥스 2010: 97~98면). 제이콥스가 강조하는 것은 사적 공간과 국가의 공공 공간 사이의 경계, 즉 차이와 다양성이 마주하는 공적 공간(특히 거리, 공원, 광장)이다. 우리는 서로 어디까지 나누고 어디까지 구별할 것인가? 공동체는 얼마만큼 공적이고 또 어느 정도 친밀성의 영역에 속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공동체에서 나눔sharing은 단순히 선(善)한 규범과 지향의 문제가 아니다.

공동체가 불가피하게 속성으로 가지는 포함과 배제의 원리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거나 공동체를 거부하는 존재의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는 공동체라는 말에 관심이 없거나 거부감을 보이는 집단 혹은 계층을 상정해 볼 수 있다. 우선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든 집단은 청년, 기초수급자를 비롯한 빈곤층, 부르주아지이다. 모든 청년 세대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공동체라는 말과 표현에 대해 ‘촌스럽다’, ‘부담스럽다’, ‘폭력적이다’라고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공동체라는 단어에 대해 되게 알려지 반응이 있었는데, 워낙 촌스런 개념이다. 또 워낙 치열? 치열하다기보다는 좀 투사 같잖아요. 그 정서가 좀 있잖아요. 그 단어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만든 사람들의 정서. (중략) 공동체라는 걸 만드는 순간, 결국은 필연적으로 만들어지는 내외부가 있다. 그런데 외부에 대한 폭력성은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해요.”(박경섭 외 2016: 208면)

청년 세대의 공동체에 대한 무관심 혹은 거부감과 더불어 도시에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하는 주민들 일부에게 빈곤층은 동네의 걱정거리 중 하나일 수 있다. 어떤 주민 활동가는 기초수급자의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날의 동네 풍경을 불안하게 설명한다. 그 날에는 동네 허름한 선술집에 수급자들이 모여들면서 술주정하는 소리가 들리고 인근 작은 슈퍼에서 검정 비닐 봉다리에 소주와 간단한 안주를 사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수급자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한다.

공동체 사업이나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접근하기 용이한 사람들은 마을의 명망가이거나 유지이거나 배운 사람들, 몫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동질적이며 규율적이고 폐쇄적인 공동체, 매력없는 공동체를 만들 것이 아니라면, 공동체 활동과 사업이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면 '자격 없는 이들, 기존의 사회에서 배제된 이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 '공동체를 통해 어떻게 인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해방의 공간을 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응답해야 할 것이다.

5. 공동체의 정치화 : 공동체와 해방의 관계

사유화와 경쟁의 전면화에 대한 대응과 저항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요구가 목가적인 전원 사회에 대한 향수, 미래에 조성될 대동(大同) 사회와 같은 이상향을 지향하는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공동체에 대한 사고와 단절, 공동체의 정치화가 필요하다. 기존 공동체 논의에 대해 재고하고 단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체주의와 파시즘이 전유해왔던 공통의 가치, 단일한 의지와 목적과 계획에 종속된 공동체 정치를 넘어서고, 동시에 자유주의에 맞서 공동체주의를 옹호했던 이들이 제시한 선량한 시민의 도덕과 의무로 구성된 공동체의 이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공동체가 매력적인 공간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차이와 다양

성이 인정되고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는 내재적인 자유주의와 초월적인 전체주의와 파시즘을 동시에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동체에 대한 사유는 파편화된 원자적 주체를 경계하고 동일성의 논리에 따라 주체를 포획하고 생산하는 장치를 벗어나야 한다.

마을공동체의 ‘사업화’가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 중의 하나는 정부지원뿐만 아니라 각 도시마다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이 생기고 공모사업이 활성화되어 주민들의 공모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가는 대신에 마을을 지속할 수 있는 방향 찾기, 마을의제발굴과 실천활동 등을 논의하는 주민토론의 장과 공론장들이 점점 줄어들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광주광역시 광산구 2016: 59면). 마을만들기가 마을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민주주의 실현의 과정이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의 구조 변화, 마을 활동가들이 주장하듯이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민주적 운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민주화가 필요하다. 선출된 지방자치단체장은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제적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는 단체장을 비판하고 민주화를 요구할 수 있을까?

새로운 가치에 대한 실험장으로서 공동체, 다른 형태의 삶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1980년 오월 광주가 보여줬던 새로운 공동체를 다시 떠올릴 필요가 있다. 사업속에서 비정치화된 마을공동체는 오월 광주의 공동체와 거리가 있다. 사업화된 마을공동체는 새로운 삶의 형태로 상상되고 있지 않으며 공동체의 민주주의는 아직 요원하다. 공동체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실천과 담론들에 대한 성찰 없이 사업business과 프로젝트project를 통해서 상상되거나 구성되면서 정치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해방과 자유의 정치와 멀어지고 있다.

차이와 다양성이 창의성의 기본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토대라면 공동체 사업이 균질화와 표준화가 아닌 평등의 지평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마을과 사업의 영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도시에 대한 정치경제적 시각에서 민주주의의 현실적 조건으로서 공동체의 경제 구성과 공유 자산의 확보와 관리(오스트롬 1990[2010]; Gibson-Graham 2006), 도시권에 대한 정치적 요구와 실천(하비 2014)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에 대한 모색과 실험이 시도되어야 한다. 더불어 갈등과 분쟁이 제거된 시골 마을 이미지에 갇힌 공동체에 대한 통념에서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상실된 과거의 공동체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 공동체 만들기의 목표가 아니라면, 공동체가 성찰성이 제거된 언어들로 표현된 유토피아 같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한 것은 다른 삶에 대한 상상력과 실천일지 모른다. 바우만(2009)은 해방의 가능성이 공동체주의자들의 관심사였던 적이 없으며 자유와 안전의 구도 속에서 공동체주의자들이 안전에 편에서 있음을 지적한다. 바우만은 “인간의 자유를 넓히고 파고들어가게 되면 인간 전체의 안전의 함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자유와 안전이 상호 공존 속에서 각각 증대됨은 물론이고 이들이 같이 성장할 수도 있다”(2009: 290면)고 주장한다.

이러한 자유와 안전의 공존, 해방의 공동체가 그리 멀리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해방과 자유가 대립적인 것도 아니다. 이미 광주 사람들은 1980년 오월에 그러한 해방의 공동체를 경험한 적이 있다. 광주의 공동체는 새로운 통치테크놀로지로서 부각되는 공동체 실천들에 대해 재고하고 안전과 질서의 양식, 규율의 준수로서 공동체가 아니라 자유와 해방과 결부된 공동체를 제시한다. 광주 항쟁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공동체는 국가나 사회의 요청이나 개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구성되거나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당시 항쟁의 공동체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사건(박경섭 2015: 47~48면)과도 같았다. 광주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폭력에 항거하며 공동체를 만들 계획도 목적도 없었다. 사람들이 밤과 낮을 잇고 싸워서 시내에서, 금남로에서, 도청에서 계엄군과 공수부대를 축출하고 목격한 것은 해방구였다. 시민들의 힘으로 얻은 해방 공간은 한편으로는 자유의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기존 질서와 사회에서 이름 없는 자들, 자격 없는 자들은 배제되지 않았다.

해방 광주리는 공동체는 내가 타자에게로, 타자가 내게로 열리는 정치적 공간은 아니었을까? 우리가 사건을 불러올 수 없지만 공동체를 요청하는 사건과 재난(슬닛 2012)을 안전과 규범 지향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해방과 자유의 확대로, 협동의 힘을 발휘하는 장으로 재구축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자료

광주광역시 광산구·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 전국 마을론 컨퍼런스 『오월광주, 마을을 논하다』 자료집, 2016.

광주광역시 남구마을공동체협력센터, 『2016 남구형 마을만들기&일자리 창출 지역창안제』 자료집, 2016.

국토교통부,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시행 가이드라인』(2017.04.12. 일부 개정), 2017.4.

김성운, 『마을만들기와 자원봉사, 신자유주의의 보충물』, 민중언론 <참세상> 2014년 2월 주례토론회 발표자료집, 2014.

이상준, 『도시재생 뉴딜 사업계획 수립방법 및 전략』, <2017년 도시재생 뉴딜 관계기관 워크숍> 자료집, 2017.

2. 논문 및 단행본

강수돌 외, 『대안 공동체 운동의 평가와 전망』, 『진보평론』 제32호, 진보평론편집부, 2007.

강위원, 『기적 아닌 날이 없다: 공동체, 농촌 그리고 마을복지』, 오월숲, 2017.

구자인, 『국내 공동체운동의 세 가지 조류』, 『환경과 생명』 1995 겨울호, 환경과 생명편집부, 1995.

구자인·곽동원·이호율, 『마을이 살아야 농촌이 산다: 전라북도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경험』, 소박한풍경, 2010.

김미연, 『마을지 유형과 제작 주체 연구: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김상철·권단·김신범·김정찬·박영길·허승우·한채운, 『모두를 위한 마을은

- 없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던지는 질문』, 숲창, 2014.
- 김예란·김용찬·채영길·백영민·김유정, 『공동체는 발명되어야 한다: 서울시 마을미디어 형성과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회』 통권 81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17.
- 김용우, 『공동체운동의 현실과 전망』, 『사회비평』 제31권, 사회비평편집부, 2002.
- 김은희·이영범, 『도시의 마을만들기 동향과 쟁점』, 국토연구원, 2013.
- 데이비드 하비, 『반란의 도시』, 에이도스, 2014.
- 리베카 솔닛, 『이 폐허를 응시하라: 재난 속에서 피어나는 혁명적 공동체에 대한 정치사회적 탐사』, 펜타그램, 2012.
- 리처드 세넷, 『투게더』, 현암사, 2013.
- 모리스 블랑쇼·장-뤽 낭시, 『밝힐 수 없는 공동체, 마주한 공동체』, 문학과지성사, 2005.
- 박경섭 외, 『공동체의 경계』, 전남대학교출판부, 2016.
- 박경섭, 『항쟁의 에토스와 공동체: 1980년 5월 광주를 돌아서』, 『한국언론정보학회』 통권 71호, 한국언론정보학회, 2015.
- 박주형, 『도구화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제23권, 한국공간환경학회, 2013.
- 박재동·김이준수, 『마을을 상상하는 20가지 방법』, 산티, 2015.
- 벤자민 바버, 『강한 시민사회 강한 민주주의』, 일신사, 2006.
- 서동진, 『혁신, 자율, 민주화... 그리고 경영: 신자유주의 비판 기획으로서 푸코의 통치성 분석』, 『경제와 사회』 89호, 경제와사회편집부, 2011.
- 아이리스 매리언 영, 『차이의 정치와 정의』, 모티브북, 2017.
- 안토니오 네그리·마이클 하트, 『공통체』, 사월의책, 2014.
- 오마이뉴스 특별취재팀, 『마을의 귀환: 대안적 삶을 꿈꾸는 도시공동체 현장을 가다』, 오마이북, 2013.
-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서: 공유자원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랜덤하우스코리아, 2010.
- 앤서니 엘리어트·브라이언 터너, 『사회론 - 구조, 연대, 창조』, 이학사, 2015.
- 유창복, 『우린 마을에서 논다』, 또하나의문화, 2010.
- 윤미숙, 『흙추는 마을 만들기: 동피랑 벽화마을에서 시작된 작은 기적』, 남해의봄날, 2015.
- 자크 랑시에르,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08.

- 장-뤽 낭시, 『무위의 공동체』, 인간사랑, 2010.
- 장덕진, 『박근혜 정부 지지율의 비밀-정치적 양극화』, 『황해문화』 통권 제82호, 새얼문화재단, 2014.
- 정이담 외, 『문화운동론』, 공동체, 1985.
- 제인 제이콥스,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그린비, 2010.
- 조르조 아감벤, 『도래하는 공동체』, 꾸리에, 2014.
- 조한혜정, 『다시 마을이다』, 또하나의문화, 2007.
- 지그문트 바우만, 『액체근대』, 강, 2009.
- 최협 외, 『공동체론의 전개와 지향』, 도서출판선인, 2001.
- 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독일 이데올로기』, 청년사, 2007.
- 파커 J. 파머,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글항아리, 2012.
- 하르트무트 로자 외, 『공동체의 이론들』, 라움, 2017.
- 한국도시연구소, 『도시공동체론』, 한울, 2003.
- 황익주 외, 『한국의 도시 지역공동체는 어떻게 형성되는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J.K. Gibson-Graham, *Postcapitalist Politics*, Univ of Minnesota Press, 2006.

Abstract

The politics of building community : ideas, discourses, and practices

Park, Kyung-seop*

In South Korea, on the one hand the idea of community is cliché and on the other hand something innovative. The community is not concerned with the nostalgia for the pre-modern village, also the imagination and practice of other forms of life. Building Community looks like a miracle medicine for social problems as welfare, health care, security and income inequality etc. This article explores the politics of the community through reflection on policy and the field that the concept of community is most often used. How does the community become non-political, and in what practices and languages? Above all, the community is in a discrepancy between discourse and practice. In building community, the community is an ideal that is incompatible with urban life and is a geography of imagination. And it is the languages such as reciprocity, sharing, solidarity, and communication that explain the community that bridge the gap between ideal and reality. Another condition that enables the non-politicization of the community is the process of subjectification through the community. There are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the community and those who are not. The community is closely related to the language and practice of the middle class. Their language, however, works in reality as ambiguous, positive, and value-neutral. Especially, the usage of the word 'sharing' which expresses the ideal of the community is used normatively even though it is very political. It should be politicized through the reflection on the discourse surrounding the community and the practice of community building while guarding the conservativeness of the community. The key issue in the politicization of these communities is the dilemma of community

* The May 18 Institute, JNU

and freedom. Considering community and freedom together is the starting point of community politics. Pointing to its starting point is Gwangju in May 1980.

Key Words : community, building community, middle class, politics, governmentality, non-politics, freedom, may uprising in Gwangju

<필자소개>

이름 : 박경섭

소속 : 전남대학교

전자우편 : forkant@chonnam.ac.kr

논문투고일 : 2018년 1월 21일

심사완료일 : 2018년 2월 8일

게재확정일 : 2018년 2월 20일